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 집중관리기간('26.6월~'26.8월) 운영...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 강화
- 현장 방문 강화 및 위기가구 발굴, 전기요금 감면·재해위로금 신속 지원, 주거시설 안전점검, 여름나기 물품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현장점검 강화,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4,000여 명(7.8%)이며, 이 가운데 독거가구는 27,000여 명(취약계층의 61.1%)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6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집중지원 대책은 첫째,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방문에서는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월 72,000원,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국민과 기업,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중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충복 (044-202-5610)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5620)

